

# 확진자 20만명 속 개학... 학부모 '혼란'·교사들 '분주'

### 등교 방식 학교 자율...불분명해 혼란 가중 백신접종 완료자 수 적어...집단감염 우려 “자가진단키트 관련해 학부모 문의 있어”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2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새 학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등교 방식에 대한 정부 방침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이 많아 자칫 집단감염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1만9241명으로 하루 새 8만여명이 폭증했다.

동시에 이날은 초·중·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정상등교를 시작했다. 다만 교육당국은

큰 틀에서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지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등교 방식을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 방침에 따라 등교 방식이 제각각이다.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이모(30)씨는 “바쁜 학기 초가 코로나 때문에 더욱 바빠졌다. 우선 일주일간 비대면을 병행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또 학교 방침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 학생들에게 주 2회 등교 전 자가검사키트 검사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 문의가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김모(31)씨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빠지는 학생이 한

반에 평균 3명씩 되는 것 같다”며 “학교 방침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더 많아졌을 때는 혼란과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혼란스럽기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학교 방침에 따라 전면등교 혹은 등교·원격수업 병행, 오전만 등교, 격주 등교 등으로 나뉘어 복잡하고,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토로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는 이모씨는 “등교 안 하는 조건은 자가진단키트 양성인데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14일부터는 동거인이 확진돼도 미접종 학생은 등교가 가능하다는데 무슨 기준으로 지침을 세웠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 김모(42)씨는 “단축 수업을 하고 설문조사로 급식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다”며 “이 때문에 일정 조정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e학습터를 통해 자율학습을 제공하고 있다”며 “6교시 수업을 20~30분 안에 끝낸다고



새학기 전면 등교 첫날인 2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산동 송정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하는데 학습 격차가 있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신규 확진자가 23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은 이달 중순으로 예측하면서 하루 최대 35만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남진기자

## “성폭력사건 대법 장기계류, 피해자 회복 방해”...인권위 진정

### 해군 상관 성폭력·준강간 사건 단체들 기자회견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해군 상관의 부하 장교 성폭행 의혹 사건과 만취 여성 준강간 의혹 사건 관련 단체들이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피해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가장 보통의 준강간 공대위'는 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대법원에 위 두 사건 판결을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상관 성폭력 의혹은 지난 2010년 피해자 김하나(가명)씨가 직속 상관인 박모 소령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김씨는 피해 사실을 당시 지휘관인 김모 대령에게 전했다. 김 대령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어 2016년 군 수사관에 알렸다고 주장한다. 가해자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 측은 2018년 상고했으나 3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김씨는 여전히 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해자가 2심에서 무죄 판

결을 받으면서, 김씨는 주변인들로부터 '무고한 가해자를 고소한 사람' 취급을 당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은 지난 2017년 피해자 김정은(가명)씨가 클럽에서 만난 20대 남성에게 준강간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지난 2020년 검찰이 상고했으나, 1년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날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미루는 이유조차 명확히 알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대법원의 이 같은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인권위가 법원에 ▲두 사건에 대해 즉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것 ▲피해자들이 장기미제사건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할 것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는 인권위에 대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김재환기자

## 코로나 확진·격리자, 오는 5일·9일 오후 5시부터 '일시적 투표 외출' 허용

### 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일시 외출이 가능하다.

투표시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선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도 선거를 위해 외출할 수 있게 됐다.

방대본이 마련한 방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선거일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의 외출이 가능하다.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단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5일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담당 보건소장은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각각 외출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슬비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